

늦었지만...전남도, 5·18 사적지 발굴 나섰다

8개 시·군에 기념물 74곳 기념사업위 구성 심의·자문 체계적 관리·사적지 지정 추진

전남도가 각 시·군에 흩어져 있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 발굴과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

그동안 기념물로 지정해 관리해 왔지만, 사적지 발굴 추진은 처음이다.

광주시와 달리 전남도와 전남도의회는 그동안 5·18 기념사업에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5·18 민주화운동 35년만인 지난 2015년 전남도의회에서 뒤늦게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조례가 처음 제정됐고, 지난 6월 도의회에서 '전남지역 5·18 사적지 관리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리는 등 뒤늦은 감

은 없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난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기념물이 전남 8개 시·군에 총 74개가 있다. 화순이 13개로 가장 많고, 목포 12개, 나주 11개, 해남·영암·함평 각 8개, 강진 7개, 무안 6개 등이다.

전남도는 이 곳에 안내판과 표지석을 건립, 군부독재에 항거해 계엄철폐와 민주회복을 외친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알리고 있다.

이들 기념물은 5·18민주화운동이 광주 뿐만 아니라 전남에서도 폭넓게 진행됐음을 보여준다. 실제 목표역 광장은 목포 5·18의 거점으로, 매일 수만명이 모여 쫓겨 대회를 연 곳이다. 또 광주 도청 앞 민주대성회에서 밝힌 햇볕처럼 이곳에서도 깃발이 4차레나 타올랐다. 목포역사의 계엄군에게 무고하게 학살된 광주시민을 추모하는 분향소가 설치됐다.

나주 산포 비상할주로는 5월21일 시위대가 광주로 진입하기 위해 집결한 곳으로, 150여대의 차량과 2000여명의 시위대가 20사단 1개 중대와 대치했던 항쟁의 장소다.

영암 도포 상리저수지 옆 도로에는 예비군 중대장 등이 카빈·M1소총, 실탄 2만여발을 경운기에 싣고 빼돌리려던 것을 신복·시종면 청년 20여명이 빼앗은 곳이며, 화순 너릿재는 계엄군에 의해 광주가 봉쇄되자 걸어서 이곳을 지나려는 피난민들이 죽을 잇던 곳이다.

전남도는 74개의 기념물을 5·18기념재단, 전문기들과 함께 재점검한 뒤 가치가 높은 곳을 사적지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근 '5·18기념사업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조만간 위촉식을 가질 예정이다. 기념사업위원회에서는 5·18기념사업 5개년 계획과 전남 5·18사적지 지정

심 의·자문을 하게 된다. 또 5·18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방향도 심의하게 된다.

또 전남도의회에서는 전남지역 학생들의 5·18 역사 교육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 중이다.

고영봉 전남도 도민소통실장은 "광주 뿐만 아니라 전남지역 곳곳에도 5·18 역사 사가 숨쉬고 있다"며 "각계가 망라된 5·18기념사업위원회를 통해 전남 5·18기념사업과 역사적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전남도가 5·18기념사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적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라며 "광주·전남에 산재해 있는 5·18 사적지를 점어 아닌 선으로 연결해 길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시민단체 '도시공원 협의체' 참여 거부 시에 민간 제안 7개항 입장 요구

광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공원 보존 및 이용을 위해 민간 거버넌스 구성에 나섰다 시민단체들이 협의체 자체를 거부하고 나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민간 거버넌스 구성을 위해서는 '민'이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하면서 거버넌스 운영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 등 지역 관련 시민단체들은 지난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원이민물제 민관거버넌스 협의체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시민협 등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광주시는 최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해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을 진행하고 있다"며 "공원이민물제 비록한 관계 부서 4인, 의회 2인, 외부 전문가와 민간단체 10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21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전반을 검토한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7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협 등 시민단체와 주민단체들이 요구한 7개의 요구에 대해 광주시는 무책임하고 진정성 없이 대응하고 있다"며 "광

주시가 공원이민물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입장 변화를 제시할 때까지 민관협의체의 참여를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간이 제안한 7개의 요구사항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 공개 ▲1단계 민간공원을 포함한 공원이민물제 해법을 위한 광주시의 구체적인 방안 ▲민관협의체의 구성과 구체적인 역할, 권한과 책임 등 구체적인 로드맵 제안 등을 시에 요구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운영한 광주시장이나 박병호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직접 나서 시민단체를 설득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대학 한 교수는 "시민단체에서 민관 거버넌스 구성을 무조건 거부한 것이 아닌만큼 광주시의 대응에 따라 언제든지 구성·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도시공원 문제가 첨예한 이해와 전문학적인 비용, 다양한 관계자 간의 의견 대립 등이 있어 민관 거버넌스에 분명한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출범 배제된 문화사업 복원안 통과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의 전말을 파악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지난 31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문체부 공무원 4명과 민간 전문가 17명 등 21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민중미술가 신학철 화백이 맡았다.

도종환 장관은 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블랙리스트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까지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신학철 공동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예술인들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우받으며 활동하는 여건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 제도개선, 백서발간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분과별 위원장은 진상조사는 조영선 변호사, 제도개선은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백서발간은 연극평론가 김미도 씨가 선정됐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공동위원장과 분과 위원장을 선출하고, 첫 번째 안건으로 블랙리스트로 배제된 사업을 복원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운영 기간은 기본적으로 6개월이나, 필요시 의결을 거쳐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전체 회의는 1주일에 한 번씩 개최하고, 분과 회의는 주 1회 이상 열기로 했다. 또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체부 안에 공무원 4명과 민간 전문위원 16명으로 이뤄진 별도 지원팀을 만들기로 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오른쪽 둘째)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둘째)이 지난 31일 국회에서 열린 탈원전 정책 긴급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탈원전해도 전기요금 폭탄 없다" 당정 한목소리

정부·여당 정책 협의

정부와 여당은 지난 31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당정 협의에서 탈원전에 따라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고 전기요금 대란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환경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기생산 비용(균등화 발전원가)을 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에게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원전 등의 균등화 발전 원가를 산정하고 공개하기로 했다"며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드는

환경, 사회적 비용을 모두 반영한 비용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앞서 당정 모두발언에선 "원전이 저렴하다는 주장은 원전 발전단가에서 포함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폐기를 처리 사고 위험 등 감안하면 결코 저렴하지 않다"며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원가가 낮아지고 있는데 현재 원가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미국 정부에서도 환경·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면 2022년엔 태양광 발전이 원전보다 저렴해진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하는데 탈원전을 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없고 전기요금 폭탄도 없다.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운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탈원전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의 공간에는 국민이 정확히 판단할 사실 정보가 부족한 면도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들으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위안부합의 TF '피해자 중심' 검토 착수

정부가 지난 3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직속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켜 한일 위안부합의(2015년 12월 28일)에 대한 검토에 착수함에 따라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우선 TF의 검토 작업 범위는 한일 합의의 경과와 합의 내용 전반, 이행 경과 등에 두루 걸쳐 있다. 2014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양국 외교부 국장 간 협상을 거쳐 나온 위안부 합의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을 꼭 지켜야 한다는 관련 문구 등이 포함된 경위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더불어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위안부 협상이 2015년 12월 말 급물살을 타면서 합의 발표까지 직행한 과정 등

을 두고도 상당한 궁금증이 제기된 바 있다.

TF가 이날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피해자와 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해 나가기로 함에 따라 피해자들 목소리가 합의에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에 대한 규명도 이뤄질 전망이다.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에 입각한 배상' 요구가 '책임 인정' 및 성격이 모호한 일본 정부 예산 10억 엔(약 101억 원) 거출로 귀결되던 시점까지의 과정도 검토 대상이다.

연례를 목표 시점으로 설정한 이번 TF의 검토 결과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관계 전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연합뉴스

신임 방통위원장에 이효성 교수 임명

허욱·표철수 방통위원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효성(66·사천)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으로는 허욱(55) 엑스퍼트 컨설팅 가치경영연구소장과 표철수(67) 전 경기도 정부부처차기 임명됐다. 허 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표 부처사는 국민의당이 각각 추천했다.

이효성 신임 방통위원장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서울대 신문학과를 졸업했고 MBC와 경향신문, 한국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한 후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또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등 시민단체에서 왕성하게 활동했다. /임동욱기자 tuim@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광공인중개사

상 가 건 물

1. 쌍촌동 5층 상가건물 대200㎡ 매11,8억원(보9,500 월500 포함)
2. 월곡동 4층 상가건물 대471㎡ 매14,8억원(보1,5억 월780 포함)
3. 용봉동 4층 상가건물 대468㎡ 매11,8억원(보1,2억 월650 포함)
4. 신가동 3층 상가건물 대273㎡ 매9,3억원(보8,000 월450 포함)
5. 용봉동 3층 대로변상가 대1,100㎡ 매28억(840만/평, 웅22억 포함)
6. 노대동 3층 상가건물 대831㎡ 매26억원(보1,5억 월222 포함)
7. 일곡동 6층 상가건물 대330㎡ 매22억원(보2,4억 월900 포함)
8. 서석동 4층 상가건물 대120㎡ 매4,8억원(보5,000 월180 포함)

상 가 주 택

1. 신정동 3층 상가주택 대180㎡ 매8,9억원(보6,000 월370 포함)
2.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360㎡ 매8,8억원(용27억 보9,000 포함)
3.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10㎡ 매10,3억원(보3,7억 월280 포함)
4.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250㎡ 매5,9억원(보6,000 월240 포함)

공 장 / 토 지 / 기 타

1. 도천동 하남산단9번로 광산C 입구 공장2동 대1,218㎡ 매12억원
2. 진도군 군내면 나리 바다조망 일야48,600㎡ 매6,6억원
3. 신가동 생산단지 담745㎡ 매3,65억원
4. 하남동 일반상업지역 대로변 대770㎡ 매23억원
5.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전1,207㎡ 매2,9억원
6. 산월동 자연녹지 택지조성원로 대290㎡ 매3,3억원
7. 장성군 남면 녹진리 1중일부주거 전2,115㎡ 매2,8억원
8. 매곡동 대광로제비안 1층 상가 주출입구코너 71㎡ 매5,2억

부동산 매물 상담 환영

010-2572-4663 홍창경
북구 문화예술회관 근처

태성공인중개사

상 가 / 상가점포

- 금호동 7층 건물(보증금 5,4억 월1,300만) 매 32억원
- 금호동 6층 건물(보증금 2,4억 월1,500만) 매 36억원
- 치평동 5층 건물(보증금 1,7억 월980만) 매 25억원
- 흑석동 5층 건물(보증금 3,4억 월1,500만) 40억원
- 하남동 3층 건물(보증금 6,2억 월2,200만) 매 50억원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26억원(보2억원,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현 의류점 입점 매 13억원 (보1억5천, 월5백만 포함)
- 월곡동 5층 건물(보증금 4억 월 460만) 매 25억
- 쌍암동 4층 건물(보증금 1,3억 월 1,400만) 매 29억
- 쌍암동 5층 건물(보증금 3억 월 1,450만) 매 35억
- 신가동 4층 건물(보증금 6천만 월 520만) 매14억
- 송정동 2층 상가건물 대385㎡ 건물500㎡ 매 13억

토 지

- 용천동 생산녹지, 대로접 9,400㎡ 매 48억원
- 신정동 생산녹지, 참고용지 3,810㎡ 20억
- 신정동 생산녹지 참고용지 도로접 990㎡ 5억원
- 광산구 대산동 계획관리지역 전 30,000㎡ 매 45억 (물류창고, 야적장 적합)
- 광산구 대산동 일야 36,000㎡ 매 3억
- 남평동 우산리 계획관리지역 담 3426㎡ 4억2천만원 (가든식당 적합)
- 장성군 삼서면 홍정리 대지 1316㎡ 매1억4천(지대농음, 남향)
-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계획관리지역 전 5,000㎡ 매 8억3천
- 담양군 월산면 계획관리지역 전 30,000㎡ 매 16억원
- 담양군 남면 학산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참고용지 4,500㎡ 매 21억원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3,000㎡ 매 1억8천만원

매물 접수, 상담 환영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대형토지

- 빛그린산업단지 인근
- 문장공용터미널 근접
- 대로 및 중로 3면 도로접
- 개발가능 생산녹지 5,000평
- 가격 : 저렴하게 협의

H. 010-5236-7458